

# 입법정책브리핑

Legislation & Policy Briefing

제2023-7호

발행일: 2023. 7. 12. (수)

제407회 국회(임시회, 2023. 6. 1. ~ 2023. 6. 30.)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팀은 (사)지평법정책연구소와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정책적 배경과 관련 법정정책 자료를 전달하는 입법정책브리핑을 발간합니다. 입법정책브리핑은 입법과 정책을 통합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법이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고 정책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하여 구현되는 데에 기여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 목 차

### 1. 개관

### 2. 주요 법정정책 이슈

가. 금융규제 · 제도 개선

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

다. 출생통보제 도입

※ 별도의 인용표기가 없는 인용문과 그림 및 도표는 원문을 링크해 두었습니다.

## 1. 개관

제407회 국회(임시회)는 2023년 6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30일간 진행되었으며, 6월 30일 열린 제7차 본회의에서 모두 36건의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제407회 국회 제7차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1)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신속하게 제재하고 부당한 이득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 신설 등 스마트농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4) 국제입양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제407회 국회의 2023년 6월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총 36건의 법률안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1	법제사법위원회(3)	<a href="#">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법제사법위원장
2		<a href="#">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법제사법위원장
3		<a href="#">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a>	소병철 의원 등 13인
4	정무위원회(6)	<a href="#">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정무위원장
5		<a href="#">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a>	정무위원장
6		<a href="#">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정무위원장
7		<a href="#">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a>	정부
8		<a href="#">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a>	정부
9		<a href="#">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a>	서병수 의원 등 18인
10	기획재정위원회(6)	<a href="#">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기획재정위원장

	소관 상임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11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회(2)	<a href="#">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4 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a>	정부
12		<a href="#">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a>	정부
13		<a href="#">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a>	김주영 의원 등 20인
14		<a href="#">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a>	위성곤 의원 등 12인
15		<a href="#">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a>	조오섭 의원 등 13인
16		<a href="#">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장
17		<a href="#">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장
18		행정안전위원회(1)	<a href="#">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a>
19	문화체육관광 위원회(3)	<a href="#">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a>	문화체육관광 위원장
20		<a href="#">국악진흥법안(대안)</a>	문화체육관광 위원장
21		<a href="#">미술진흥법안</a>	도종환 의원 등 16인
22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회(4)	<a href="#">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4 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a>	이양수 의원 등 11인
23		<a href="#">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a>	정부
24		<a href="#">해사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a>	이양수 의원 등 11인
25		<a href="#">해상교통안전법안</a>	이양수 의원 등 10인
26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2)	<a href="#">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a>	양금희 의원 등 13인
27		<a href="#">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a>	김한정 의원 등 10인
28	보건복지위원회(4)	<a href="#">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a>	보건복지위원장
29		<a href="#">한의학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보건복지위원장

	소관 상임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30		<a href="#">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대안)</a>	보건복지위원장
31		<a href="#">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보건복지위원장
32	환경노동위원회(3)	<a href="#">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a>	전해철 의원 등 10인
33		<a href="#">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a>	이주환 의원 등 10인
34		<a href="#">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a>	이원욱 의원 등 11인
35	국토교통위원회(2)	<a href="#">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국토교통위원장
36		<a href="#">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국토교통위원장

이번 호에서는 여러 중요한 법안 가운데 법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금융규제·제도 개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 출생통보제 도입 이슈를 다룹니다.

## 2. 주요 법정책 이슈

### 가. 금융규제·제도 개선

#### 개요

정부는 그동안 투자자로부터 신뢰받는 자본시장의 구축과 안전한 투자 여건 조성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그러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여전하고, 오히려 그 수법이 지능화·조직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테라-루나 사태, 미국의 FTX 파산 사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투자자가 안심하고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도 미비한 것이 실정입니다. 이에 국회는 주가조작법을 엄벌하고, 가상자산시장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들을 제·개정하였습니다.

2023년 6월 30일 본회의에서는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신속하게 제재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 입법 동향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p><b>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b></p> <p>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자본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다수 투자자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위법행위이며, 자본시장의 거래규모가 확대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그 수법도 지능화·조직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현행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 벌금형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나, 형사처벌의 경우 범죄 구성요건에 대한 엄격한 입증책임이 요구되어 상당수의 불공정거래행위는 불기소되거나 기소되는 경우에도 경미한 수준의 처벌에 그치고 있음. 또한 수사, 기소, 소송 등 형사절차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형사처벌만으로는 점점 더 지능화되고 고도화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신속하게 처벌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액 산정 방식을 법률에 규정하며, 자진신고하거나 범죄 규명 등에 기여한 경우 그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신속하게 제재하고 관련 부당이득을 박탈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p>	2023-06-30 (원안가결)
2	정무위원회	<p><b>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b></p> <p>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자산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자산으로, 2030세대를 중심으로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되면서 국내외 가상자산시장은 크게 성장하고 있음. 그런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금지되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여 이와 관련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여도 처벌 및 피해구제 등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실제로 테라-루나 사태, 미국의 FTX 거래소 파산 사태 등 가상자산시장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가상자산 이용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켰으며 이는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지기도 하였음. 한편,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 및 제도화 움직임이 세계 각국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유럽연합에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이 제정되기도 하였으나 가상자산시장과 가상자산산업 전반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이나 규율체계는 부재한 상황임. 따라서 우선적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중심의 입법이 필요한 바, 이 법을 제정하여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보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p>	2023-06-30 (원안가결)

## 정책 동향

### [120대 국정과제] 35.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금융위)

#### 과제목표

투자자가 안심하고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투자자 보호장치가 확보된 가상자산 발행방식부터 국내 ICO 허용

#### 주요 내용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 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 NFT 등 디지털자산의 발행, 상장 주요 행위규제 등 소비자보호 및 거래안정성 제고 방안 마련
- BIS, FSB 등 국제금융기구 및 美 행정명령 등 각국 규제체계 논의 동향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의 탄력성 확보
- (국내 ICO 여건 조성) 가상자산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유틸리티, 지급결제 등)으로 규제 체계 마련
-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여건 조성 및 규율체계 확립
- ★ 필요시 금융규제 샌드박스 우선 활용
- 비증권형 코인의 경우, 국회 계류 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방지 등 규율체계 마련

### [120대 국정과제] 36.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금융위)

#### 과제목표

우리 자본시장의 공정성 제고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신뢰받는 시장을 구축  
자본시장과 실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도모

#### 주요 내용

- (원스톱 범죄피해자 솔루션 시스템 구축) 부처별로 분산된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총괄·관리하여 연계 강화, 신변 보호부터 법률 지원·경제적지원·일상회복까지 종합적으로 '원스톱' 서비스 지원
- (주식·금융투자상품 등 과세제도 합리화) 개인 투자자(초고액 주식보유자 제외)에 대한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는 투자자 보호장치 법제화 이후 추진
- (공매도 제도 개선) 개인이 공매도 과정에서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비율(現. 140%)을 합리적으로 인하하는 등 공매도 운영 개선 추진
- (물적분할 관련 주주 보호) 신사업을 분할하여 별도 자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소액주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정비
- (상장폐지 요건 정비) 기업 회생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상장폐지 결정, 상장폐지를 단계적 추진하여 투자자 보호 강화
- (내부자거래 규제 강화) 내부자 지분매도시 처분 계획을 사전 공시토록 하고, 주식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시 소액주주 보호 장치 마련
- (투명성·공정성 개선) 외부감사인 역량 강화를 통해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제재 실효성 제고 등 증권범죄 대응 강화
- (외환시장 선진화) 외환시장 접근성 개선, 대외거래 규제 완화 등 외환시장 선진화 및 국부펀드 역할 확대 등을 통한 해외투자소득 제고

2023 경제정책방향(관계부처 합동, 2022. 12. 21.)

① (금융혁신) 금융규제·제도 개선 및 외환시장 선진화 추진

- (금융규제) 금산분리 완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등 금융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혁신 지속
  -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 금산분리 개선방안을 마련(23.上) 하고 금융사-핀테크간 협력증진을 위한 업무위탁 확대 지속 추진
  - \* (예시) 금융회사 부수업무 범위 및 자회사 출자 규제 합리적 개선 등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시장 규율체계 단계적 마련
    - \* (1단계) 고객자산보호, 불공정 거래 규율 등 이용자보호 규제 도입 → (2단계) 국제기준 가시화시 가상자산 발행·공시 등 시장질서 규제 보완
  - 정책금융의 경기대응성 강화\* 등 역할 재정립·지원 효율화 추진
  - \*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민간 금융 중복 최소화 방안 강구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23.上)
- (외환시장) 제3자 FX 허용<sup>1</sup>, 외환시장 선진화방안 후속조치 과제<sup>2</sup> 구체화
  - 1」 외국금융기관이 본인 계좌가 개설된 은행이 아닌 제3의 은행과도 환전 가능
  - 2」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조건 개장시간 연장 방안 등 구체화(23년말 법령 개정)
  - 외환거래 절차 간소화, 사후보고 중심 체계 전환 등 국민·기업·금융기관의 외환거래 규제부담 경감을 위한 신외환법 제정 추진

출처: [2023 정부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2023 정부 업무보고(금융위원회, 2023. 1. 30.)

8. 금융범죄·사기로부터 국민들을 확실히 보호하겠습니다

- 조직적 보험사기 예방방안 마련, 전환사채 이용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 불법·불건전 영업을 사전차단하고 사후 제재·처벌 강화

- ① 신·변종 보이스포싱 대응을 위해, 가상자산거래소 사기이용계정 지급정지\*, 통장협박\*\*을 당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 마련
  - \* 가상자산거래소 보이스포싱 피해자에도 금융기관과 동일한 피해자 구제절차 적용 등
  - \*\* 계좌가 공개된 자영업자 등에게 소액 송금 후 자영업자 등의 계좌 지급정지
- ②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신속한 차단\*으로 서민피해 예방
  - \* 정부·검찰 등 외 인터넷진흥원·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도 전화번호 차단 요청 허용
- ③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제재강화 방안(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등)의 신속한 제도화 추진(「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 ④ 강력보험범죄, 조직적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보험인수 가이드라인」 마련, 보험사기 알선·권유 행위에 대한 사후제재 강화 추진
  - \* 소득대비 과도한 보험가입시 재정심사 강화 등
- ⑤ 전환사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무자본 M&A 등)에 대한 대응 강화
  - \* 전환사채 발행·유통시 공시의무 강화 등 투자자 보호방안 강구
- ⑥ 불법 주식리당방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유사투자자문업 규제 정비\*(「자본시장법」 개정)
  - \* (1) SNS·채팅방 등 양방향 소통 채널을 이용한 영업 금지
  - (2) 손실보전·이익보장 약속 금지, 광고규제 등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강화

□ 새롭게 등장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율체계 정비

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단계적 가상자산 규율체계 마련

▶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 중심으로 우선 입법 → 국제기준 가시화 시 추가·보완

\* (1단계) 고객자산보호, 불공정 거래 규율 등 이용자보호 규제 도입 →  
(2단계) 국제기준 가시화시 가상자산 발행·공시 등 시장질서 규제 보완

② 조각투자·증권형 디지털자산(“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 (1) 증권 발행시 제도권 내에서 분산원장 기술이 활용되도록 하여 투자자 재산권 보호  
(2) 혁신 수요에 부합하도록 다양한 권리의 발행과 소규모 장외거래 지원

출처: 2023 정부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 참고 자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정무위원회

[윤석관 의원안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도입](#) 2020. 11.

[윤창현 의원안: 불공정거래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형벌 감면](#) 2021. 2.

[박용진 의원안: 부당이득액 산정방식 법제화 및 입증책임 전환](#) 2020. 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정무위원회

[이주환 의원안: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 2021. 3.

[이영 의원안 등: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 개선 등](#) 2021. 11.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정무위원회 2021. 9.

권은희 의원안 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

[가상자산업법안 검토보고](#) 국회 정무위원회 2021. 7.

이용우 의원안 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의원안: 가상통화취급업에 대한 인가제 도입 등](#) 2020. 7.

[배진교 의원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 2021. 11.

[디지털자산거래법안 검토보고](#) 국회 정무위원회 2022. 9.

민병덕 의원안 등: 디지털자산 전반에 대한 규율체계 구축

[주가조작을 엄벌하여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조성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가상자산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강력하게 대응합니다](#) 금융위원회 카드뉴스/웹툰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카드뉴스/웹툰



### [가상자산 관련 투기 억제 및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21. 5. 10.

현재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가 불분명하고 관련 정보도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상자산에 대한 무분별한 투기 억제 및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크다. 따라서 가상자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상자산 취급업자로 하여금 리스크와 조건 등을 충분히 공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거래소 해킹에 따른 이용자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가상자산 거래자 보호를 위한 규제의 기본 방향](#) 자본시장연구원 이슈보고서 21-27 2021. 11. 22.

본 연구는 증권시장 규제 원칙 중 블록체인산업 원칙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가상자산업법 제정 방향을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에서 제시한다. 첫째 발행인과 거래자 측면에서, 중요 투자정보에 대한 의무공시제도의 도입이다. 둘째 시장참여자들과 거래자 측면에서, 자본시장에 준하는 가상자산시장에 특화된 불공정거래금지 규정의 정비이다. 셋째 가상자산거래업자와 거래자 측면에서, 매매거래의 규정화 및 청산·결제기능의 독립성 보장이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보관업자와 거래자 측면에서, 수탁자산보호의무의 규정화 및 위탁고객의 법적 지위 보장이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가상자산시장의 정보비대칭 문제가 해결되고, 가상자산보유자 위탁자산의 재산권이 안정적으로 보호되며, 시장의 사기적 행태가 줄어 가상자산시장이 신뢰성을 바탕으로 국내 블록체인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 혐의 행위의 특징과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이슈보고서 18-16 2018. 12. 12.

2015~2017년 증권선물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들을 분석해 보면 3대 불공정거래 행위인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가 주종을 차지하고 있으며, 내부자·전직자·관계자 등 내부정보를 아는 사람들이 주로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벌이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단기간 동안 동일기업의 주식을 대상으로 한 반복적 불공정거래 행위가 3대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현상은 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체계 및 제재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검찰의 3대 불공정거래 사건의 처리 현황을 보면 처리율이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다른 사건과의 간접적 비교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의 처리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사건을 이첩받고 검찰이 사건을 처리한 시점까지 걸린 기간도 평균 1년을 넘고 있어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적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법원의 자본시장법 위반 판결은 집행유예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사안이 복잡한 불공정거래 사건 특성으로 재판 진행이 지체된 결과라는 해석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회적 인식의 한 근거가 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불공정거래 사건을 효과적으로 제재하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형사제재를 보완하여 금전적 제재와 비금전적 행정제재 등 다양한 제재 수단을 두고 있다. 불공정거래 사건의 복잡성과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 효과를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기존 형사벌 중심의 제재와는 별도로 다양한 제재 수단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 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

### 개요

미·중 패권분쟁으로 가속화된 첨단산업 및 기술 경쟁은 갈수록 그 양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은 국가 및 경제 안보에 첨병 역할을 하고 있어, 첨단전략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일은 생존과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AI, 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법령을 마련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개최,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발표 등 전방위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는 최근 이와 같은 정부의 적극적 행보에 힘을 보태는 새로운 입법을 행하였습니다. 이는 [입법정책브리핑 제2023-1호에서 다룬 국가전략기술 지원·육성](#) 이슈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2023년 6월 30일 본회의에서는 첨단산업 공급망의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 산업위원회의 지체 없는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 입법 동향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회	<p><a href="#">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a></p> <p>미국, 일본, 중국, 대만, 유럽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가적인 역량 집중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과감한 지원을 추진 중이며, 승자독식 구조의 미래 전략산업 시장에서 경쟁국보다 빠르게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노력중임. 우리 정부와 국회도 이에 대응하여 반도체 특별법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2021년 신속하게 제정하여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전략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통해 민·관이 함께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 중임. 특히, 승자독식 구조의 전략산업 시장과 초기 대응이 중요한 첨단산업 공급망 충격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체 없는 의사결정과 신속한 지원조치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 체계에서는 지원대상인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특화단지, 특성화대학 등의 지원에 있어 예측 가능성이 낮으며,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을 협의하는 첨단전략기술조정위원회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력양성 등을 논의하는 전문위원회로 협의기구가 이원화되어 있어 신속하고 통일된 지원논의에 적합하지 않고, 인허가 신속처리와 같은 핵심 지원방안이 특화단지에 국한되어 있어 유연하고 과감한 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범위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첨단전략기술조정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로 통합·확대 개편하며, 전략산업 등 선도사업을 신설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	2023-06-30 (수정가결)

## 정책 동향

[120대 국정과제] 24.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산업부)

### 과제목표

경제안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첨단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  
반도체, AI, 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 및 新격차 창출

### 주요 내용

(경제안보 확보)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성장기반 마련

- 반도체 설비투자 시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및 인허가 신속 처리

\* ▲투자지원 확대, ▲인프라 구축 지원, ▲인허가 일원화 검토 등

- 전략산업(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생태계·R&D·국제협력 등 종합 지원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지원체계 본격 가동 및 지원내용 강화  
(인재양성 강화) 미래전략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
- 반도체 특성화대학을 지정하고 관련학과 정원 확대 검토
- 계약학과, 산학연계 프로그램 등 산업 현장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  
(4차 산업혁명) 로봇, 반도체 등 디지털 실현산업\* 수요연계 · R&D 강화
  - \* 로봇, AI반도체, 전력반도체, 센서, IoT가전 등
- (사회문제 해결) 팬데믹 · 인구구조 · 기후위기 등 문제해결형 신산업 육성
- 백신 · 레드바이오 · 융합바이오 등 신산업 관련 규제완화, 제도 · 인프라 구축\*
  - \* ▲바이오 제조혁신센터 구축 ▲평가 · 인증 등 바이오플라스틱 육성방안 마련 ▲유전체 규제완화 등
- 수소, CCUS 등 탄소중립 · 미세먼지 대응 에너지신산업 조기 상용화

2023년 경제정책방향(관계부처 합동, 2022. 12. 21.)

① 초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新성장 4.0 전략' 마련

- 과거 산업육성·정부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중심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구체적 프로젝트를 추진
  - \* 목표지향적 프로젝트 선정 및 민간전문가를 PM으로 프로젝트 관리(美 DARPA 방식)
- 3대 분야(新기술, 新일상, 新시장) 15대 프로젝트 추진(☞참고)
  - 新성장 4.0 전략회의(주최: 경제부총리)를 구성·운영하여 정책 추진방향을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

출처: [2023 정부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2023년 정부 업무보고(산업통상자원부, 2022. 12. 27.)

□ 설비 투자 : 민간투자 프로젝트(23년 100조원 규모) 맞춤형 지원

반도체	자동차+조선	기타
▶ 팹릭 공장 신·증설 ▶ 용인 클러스터 조성	▶ 현대차 전기차 전용공장 ▶ 스마트조선소 구축	▶ 송도 바이오 공장 설립 ▶ 이차전지 양극재 공장증설

- 규제 개선 및 인허가 신속 지원
  - 입주업종 제한 등 규제 위주의 산업단지 관리방식을 민간수요 중심으로 전면 개편 (산단 입지규제 개선방안 마련, '23.上)
  - 인접 지자체 상생인센티브 체계 마련, 인허가 타임아웃제도 도입 (첨단산업특별법) 등으로 인허가 기간 단축
    - \* 상생인센티브 : 기업투자에 따른 혜택을 인접 지자체간 공유하는 방안 마련
- 세제, 입지, 금융 등 투자인센티브 대폭 확대
  -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상향 (최대 3~4% → 10%) 및 투자 세액공제 대상 확대(신성장·원천기술 - 에너지절약 기술 등 검토)
  -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국가산단 및 특화단지(첨단산업특별법) 지정을 통한 신속한 입지조성과 용수·전력 등 인프라 국비 지원
  - 글로벌 초격차 산업 지원 등 국가전략산업 분야에 설비 및 R&D 투자지원을 포함하여 총 81조원의 정책금융 공급

출처: [2023 정부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 참고 자료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3. 4.

###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총력대응 시작](#)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 [첫 국가첨단산업 5개년 계획 수립...첨단전략산업에 '바이오' 추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 [글로벌 산업지형 변화에 대응한 전략산업 발전 방안](#)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2022-06 2022. 12. 31.

본 연구는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의약품 등 우리 제조업의 미래 성패를 좌우할 핵심 전략산업의 지형 변화를 전망하고, 이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도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각 산업의 분석 틀은 기존의 수요-공급 요인 외에 현재 미·중 기술패권 경쟁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전례 없는 산업정책 강행 추세를 고려하여 지정학(국제정치) 요인을 추가, 즉 전략산업의 업종별 핵심 변화 동인으로 공급(기술), 수요(시장), 지정학(국제정치)을 선정하였다. 업종별 주요 변화 동인 관련 심층 문헌 연구를 진행 후, 관산학연 전문가 45명과 미래 지형 전망을 위한 포커스그룹 인터뷰(FGI)를 실시하였다.

###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우리의 대응 전략 - 반도체·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2021-13 2021. 10. 15.

본 연구는 반도체, 인공지능산업을 중심으로 미·중 양국의 기술 경쟁 양상과 블록화 가능성을 분석한 후,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고 우리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중국의 부상과 이에 따른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경과와 주요 기술·산업의 대중국 기술제재 전략을 분석한다. 이어 첨단기술의 미·중 상호의존성과 블록화 사례를 분석하고, 전문가 설문조사, 기업 설문 등을 통해 미·중 기술 블록화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향방에 대해서 전망하고 우리의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 [첨단전략산업 환경변화의 특징과 대응방안 -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현대경제연구원 「VIP 리포트」 23-1호 2023. 6. 23.

최근 주요국을 중심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공급망 내재화, 기술경쟁 등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정부는 2022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4개 산업(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17개 첨단전략기술을 선정하였는데, 산업의 성장성과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가치 등을 고려해 볼 때 경제성장과 국가경쟁력 확보에 핵심적인 산업군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글로벌 시장 규모 및 성장성이 높은 반도체, 이차전지 산업을 중심으로 첨단전략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의 특징을 살펴보고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한국의 소재·부품·장비 산업 현황과 주요 이슈](#) 현대경제연구원 「현안과 과제」 23-06 2023. 5. 2.

최근 수년간 미·중 갈등, 한·일 갈등, 글로벌 공급망 불안, 반도체와 배터리 등 주요 상품 자국화 및 경쟁 심화 등으로 소부장 산업(소재, 부품, 장비 산업 총칭, 이하 동일)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지난 2001~2020년까지 20년간 국내 소부장 산업의 생산액과 부가가치액은 연평균 6% 이상 성장했다. 특히, 부품 산업은 생산액과 부가가치액이 각각 7.4%씩 증가해 왔으며, 전체 소부장 산업의 생산액과 부가가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60.1%, 68.5%로 성장을 주도해 왔다. 교역 역시 부품 산업이 소부장 산업 전체 수출의 62.7%, 수입의 57.8%, 무역수지 흑자의 74.5%를 차지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다. 이에 본고에서는 소부장 산업의 이슈를 간단히 살펴보고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다. 출생통보제 도입

### 개요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통보로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살해, 유기, 학대 등의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보호받는 여건을 확립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출생할 경우 의료인은 모친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출생자의 성별·출생연월일시 등의 출생 정보를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출생자 모친의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체 없이 모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시·읍·면의 장은 통보받은 아동이 출생 후 1개월 내에 출생신고가 됐는지 확인해야 하고,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모친 등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이후에도 신고가 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6월 30일 본회의에서는 위와 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정보가 지체 없이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통보되도록 하여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 입법 동향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법제사법위원회	<u>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u>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여 예방접종을 위한 임시신생아번호를 부여받았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2,236명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됨. 이 중 23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출생신고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는 등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이 가족과 사회의 보호를 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의 기본적인 정보를 관리하여,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의료기관 밖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 현행법상 출생신고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출생신고 시 제출하는 출생증명서 대체서면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023-06-30 (원안가결)

## 정책 동향

### 2019년 법무부 주요업무 계획

#### IV. 인권중심 법무행정 추진

##### ㉑ 인권 주무부처로서의 역할 강화

######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인권정책

- 국제인권규약상 인권옹호 정책의 국내 이행 토대가 되는 「인권 기본법」 제정 추진
- 기업의 인권경영 표준지침 발간 등 구체적인 '기업과 인권' 정책 마련

###### ○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

- 실질적 평등을 위한 부부재산제 개선, 이혼가정 자녀의 생활안정을 위한 양육비 지급제도 개선 추진
- 미성년자 성적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유예 추진
- 노인·장애인 등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성년후견제도 활성화

###### ○ 포용적 가족문화 구현 및 아동인권 향상

-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적극 검토

###### ○ 구금·보호시설 인권침해사건의 직접 조사 확대

- 원거리 구금·보호시설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사건의 신속한 대처를 위해 '화상조사시스템' 설치 확대('18년 40개 → '19년 47개)

출처: [2019년 법무부 주요업무 계획](#) 법무부 누리집

## 참고 자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신동근 의원안: 의료기관에 출생통지의무 부여](#) 2020. 9.

[한병도 의원안: 출생증명서 대체서면에 119구급대원 출동기록 추가 등](#) 2021. 6.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법무부 누리집 법무정책서비스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8~2022\) 이행평가](#) 법무부 누리집 법무정책서비스

['출생통보제' 법제화 촉구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태어났지만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 국제인권 뉴스레터

[보편적 출생 등록, 모든 아동의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웹진 인권

[보호출산제, 논쟁의 지점과 숙고할 사안: 출생통보제 도입에 따른 보완병행 입법 논의에 부처](#)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23. 7. 6.

출생통보제 도입으로 의료기관 출생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 문제가 해소될 것이 기대되고 있다. 다만, 자신의 출산 사실을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 산모의 의료기관 회피가 우려되고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일각에서는 보호출

산제 도입을 주장하지만, 아동 유기를 조장하고 태생에 대한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도 있다. 이에 익명 출산 및 비밀출산 관련 논쟁의 지형을 소개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출생신고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법무부) 2022. 10. 31.

본 연구에서는 출생신고 관련 현행 법제 및 입법동향을 살펴보고, 외국의 출생등록제도를 비교 및 검토하였으며, 아울러 최근 입법이 있었던 독일의 출생등록 관련 법제를 심층분석하였다. 그리고 최근 개정 가족관계등록법의 운용을 앞둔 상황에서 여전히 검토되어야 할 개선 이슈들을 중심으로 현행 가족관계등록법 및 동 규칙 상의 출생신고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출생신고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생신고제도의 개선 방향 및 장·단기적 도입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정방안을 제안하였다.

[아동국가책임제 구현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6.

본 연구에서는 미래 인구변화에 대응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아동국가책임제는 법제화를 통해 구현되어야만 하는 실천목표로서 새롭게 위상이 정립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한 이론적 근거 및 법제개선방안을 연구하고자 함

(사)지평법정책연구소 ·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팀



이공현 명예대표변호사  
(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장)  
02-6200-1770  
leekh@jipyong.com



임성택 대표변호사  
02-6200-1746  
stlim@jipyong.com



윤영규 변호사  
02-6200-1743  
ykyun@jipyong.com



김진권 변호사  
02-6200-1812  
jkkim@jipyong.com



민창욱 변호사  
02-6200-1841  
cwmin@jipyong.com



이춘희 선임연구위원  
(지평법정책연구소)  
02-6200-0628  
chy@jipyong.com

지평법정책연구소 · 지평 공공정책팀 입법정책브리핑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단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설문조사 참여 링크](#)).